

정병석의 경제멘토링



관리들이 상납받는 경우

공직자들은 공과 사를 엄정하게 구분하고, 재직 중에는 일체의 선물(금품)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당연한 기대를 저버리는 공직자들의 사례가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조선시대의 관리들은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 낮은 녹봉을 보충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관리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통상의 관례였고, 이것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청백리로 알려진 황희 정도 선물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된 사례가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전라도 감사를 역임한 어느 양반의 일기에는 그가 재직 중 10여 년에 걸쳐 2855회의 선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 달에 평균 42회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도 관료 본인이 꼼꼼하게 선물 받은 품목, 준 사람 등을 날짜별로 일기에 기록해 두었기에 밝혀진 것이다. 이 ‘미암일기’는 지금은 국가의 보물로 지정된 소중한 자료이다. 선물, 즉 상납을 오늘날처럼 죄악시켰다면 이렇게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었을 리 없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이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었기에 이를 자세하게 기록해 둔 것이다.

선물 받은 품목은 쌀·콩·보리 등의 곡류, 면포, 문방구류, 어물, 과일, 견과류, 약재류 등 다양하고 그 양도 많았다고 한다. 금액으로 환산해도 관리의 녹봉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리들은 이 선물만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었고, 퇴직 후를 대비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도 활용하였다.

관리들과의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며, 청탁 등의 반대 급부를 받으려는 주변 사람들의 시도는 관리들이 유배를 가더라도 지속된다. 역모죄가 아닌 관리들의 통상적인 범죄나 당쟁과정에서 발생한 유배는 조만간 풀릴 것으로 예상하기에 유배기간에도 인간 관계를 유지해 두어 복귀 후의 좋은 관계를 기대하는 것이다. 심지어 임진왜란 중에 강원도와 충청도에 피란 중이었던 한 관료는 난리 중에도 현지에서 수백 회의 선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백성을 근본으로 하여 왕도정치를 지향했던 조선사회가 상납, 즉 뇌물성 선물을 어떻게 관대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구조적으로 조선이 관리들에게 충분한 봉급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에 일본에서 온 사신도 조선 관리들의 봉급 수준을 알고는 그렇게 낮은 봉급으로 어떻게 생

활할 수 있느냐며 걱정했다고 한다.

봉급 수준이 낮기도 했지만 그나마도 규정대로 제대로 지급되는 것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지방 관청에 근무하는 서리들에게는 전혀 봉급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한 관청의 경사 운영비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선물이 관행화되고, 관서 운영비 등을 지방 백성들로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수탈해도 묵인하는 조선의 착취적 제도가 존속된 근거이다.

조선 초기에는 관리들에게 봉급에 충당할 토지를 지급했다. 그래서 관리들은 이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녹봉을 높게 주지 않더라도 별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 더 이상 관리들에게 분배할 토지가 없어지게 되었는데도 재정형편으로 녹봉을 올려주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관리들이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녹봉을 받고 (또는 받지도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지방 관청의 관서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여 쓰게 한 조선의 정치·행정 제도가 결국 일반 백성들을 관청이 수탈하게 만든 주요인인 것이다. 그러나 선물을 받는다고

중앙의 관리들이 지방관리들을 강하게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던 것이다.

관리들이 부정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적절한 생활급을 보장해주고, 기관 운영비도 재정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제도가 갖춰진 후에는 엄정하게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단속할 명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적절한 보수나 예산지원제도가 갖춰진 후에도 상납을 받거나 부정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조선시대와 같이 선물이 묵인되는 관공의 사회가 아니다. 설 명절을 둘러싸고 많은 선물들이 오가는데 보수체계가 합리화된 오늘날에 공직자들은 더 이상 이를 수용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이제는 공직자들이 공과 사를 엄정하게 구분하고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하면서 일체의 직무관련 금품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공직자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금 시대에 맞는 명분이 있는 것이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특수 업무추진비 등의 문제도 공직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적응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양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社說

호남인사 중용없이 대통합 이룰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국정 기조로 제시한 인사대통령과 국민 대통합이 물 건너 갈 것인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1차 조각(細閣) 인선의 면면을 보면 호남 출신 인사가 사실상 배제되고, 수도권과 영남이 대부분을 차지한 때문이다.

아직 조각작업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9개 장관급 이상 가운데 호남 출신은 김장수(광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유일하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는 경남 하동, 박홍렬 청와대 경호실장 내정자는 부산 출신이며, 6개 부처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서울이 3명, 인천이 2명, 경남 1명이다.

앞으로 11개 부처와 검찰·경찰·국세청장 등 17개 청,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인선이 남아 있다고는 하나 이번 인사를 지켜본 지역민들로서는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소외가 계속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게다가 핵심 부처 장관 후보군에 이 지역 출

신 인사들이 그리 많지 않고, 청문회 통과와 전문성이 우선시 되면서 ‘끼워넣기’가 될 공산도 크다.

물론 이번 인선이 전문성과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졌고, 당선인 출신 지역인 대구·경북 인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겠으나 대통합의 단초는 호남인재의 중용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자연스럽게 ‘호남 총리론’이 부상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호남을 찾을 때마다 “호남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한 말에 주목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대통합인사부터 펼칠 것”이라며 “호남의 인재, 여러분 아들·딸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굳게 믿는다.

2차 조각과 후속 인사에 더욱 관심을 갖자. 호남에 정부에서도 소외가 계속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게다가 핵심 부처 장관 후보군에 이 지역 출

법원 보석·구속적부심도 ‘유전 허가’라니

(有錢)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의 보석 허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석 허가과 구속적부심 석방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석방이 개별 재판부와 담당 변호사 영향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면서 피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이들 제도가 ‘유전(有錢) 허가’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법의 경우 2011년 9월~2012년 8월 사이 304건의 보석이 청구돼 이중 145건(47.7%)이 허가됐다. 이번 발로는 목포지원 56건 가운데 18건(32.1%), 해남지원 18건 중 6건(33.3%) 등이 허가됐으나 순천지원은 101건 중 무려 68건(67.3%)이 허가돼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처럼 보석 허가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허가 그만큼 일관적이지 못하고, 돈이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보석

만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이 생겨나 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홍하에 대한 보석 허가는 이러한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씨는 1000억 원대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6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지역정서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시민단체 반발과 함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담당 재판부가 이 씨의 큰 사위와 사법연수원 동기생인메타 변호사도 큰 사위의 선배이자 순천지원 향관(鄕判) 출신이라 더욱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이 13일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 취소를 청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유가 되면 허가해주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허가를 할 경우 재량권 남용이자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법당국이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종교칼럼

각자 각자가 소중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하성래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교무

만 지금은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 변화가 너무나도 빨라 그 정취와 분위기를 찾을 수 없다.

졸업이라는 단어는 ‘그 업을 마쳤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첫 단어가 된다.

부른 희망과 사회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정든 교정을 떠난다는 아쉬움이 있기에 눈물을 흘렸다. 우정 어린 친구와 존경하는 선생님 그리고 추억의 책상에 깨알 같이 쓴 낙서도 마음속 깊이 고이 간직하는 것이라...

하지만 지금의 졸업은 그때의 진한 향수가 없다. 곳곳에서 사라졌고 무거움마저 든다.

눈앞에 펼쳐질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일까?

학교는 선행학습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인성을 키우고 사회성을 향상하는 전인교육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져 버린 것 같다. 초등학교는 왕따에 시달리고, 중학교는 학교폭력으로 멍들고, 고등학교는 입시로 청춘을 불사르고, 어렵게 들어간 대학은 취업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전쟁의 연속

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해 대학을 졸업하는 인원이 30만 명이라고 한다. 이 많은 인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일까?

국가나 국민의 가치 기준이 중요대학을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에 두고 있지 않은지? 누구나 대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보고 싶다.

물론 평가가 좋지 않아 회사들이 채용을 줄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소기업과 제조업계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동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인생의 목표가 취업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고급 인력을 생산해 놓고도 일할 곳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이고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자신의 기술과 기능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박종빈 대종사는 대중경 요훈품 35경에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라고 말씀하신다.

만일 국가나 국민들이 한명 한명을 소중

히 생각하고 그들 각자에게 맞는 기술교육에 투자를 한다면 분명 그들은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역군으로 이 사회를 지탱할 기둥으로 보답할 것이다.

이제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과제’를 주며 경쟁을 부추겨, 무리하게 스펙을 쌓기 위해 매진하거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학창시절을 톱으로 바치거나, 취업을 위해 성형을 하는 등의 외도시상주의를 숭배하는 후손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육은 스펙을 쌓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학문 탐구는 미래를 개척하는 근본을 연구하는 곳이 되어야 하며, 의무 교육을 마치고 나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펼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고 하여 학문만을 중시하는 그런 풍조를 하루빨리 구시대의 산물로 정리하고, 올해부터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 풍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내일이 무척 기대되는 그런 미래를 꿈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두가 노력하고 기여했으면 한다.

고교 배정, 학생 선택권 존중해야

그러나 바뀐 고교 배정이 학생의 선택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을 등급별로 나눠 교육청이 강제 배정에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무려 687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희망학교 7곳 중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또 배정 원칙에 성적을 반영함으로써 강제 배정과 원거리 배정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통학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일례로 수완지구에서 풍암고등학교로 배정된 학생은 버스로 등교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린다. 등교시간을 맞추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며, 집에 들어오면 저녁 12시가 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3년을 반복해야 한다. 눈앞이 캄캄해진다.

과연 이 학생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아무

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다닌다면 관청아진다. 자신도 그랬다”며 무책임한 말을 내뱉기도 했다.

새로 도입된 고교 배정 방식이 문제가 된 것은 강제 배정을 예견했으면서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배정 방식을 바꾸기 전에 “강제 배정 방식과 다름없는 배정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출세 우기가자 행정편의적인 발상의 극치”라며 “고교배정방식을 꼭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줄속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이해 당사자간 논의를 거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교총뿐만 아니라 광주시의회와 사립학교,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귀를 막고 안일하게 대처했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안게 됐다.

솔리프 현상을 막고 평준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바뀐 고교배정 방식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이 무시되고 공급 중심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배정 시스템의 변경에 앞서 공립고등학교의 인사시스템, 학생 지도 방식, 학습 방법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자연스런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대학 진학과 직결되는 광주 시내 고교 배정 문제를 평준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립까지 하향 평준화한 꼴이다.

지금이러다 이해 당사자인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성적이 아닌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고



정미경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사무국장

교육 정책과 제도는 교육 여건의 변화, 시대 흐름, 학생·학부모의 요구 등에 따라 변한다. 이는 교육당국의 책무이기도 하다.

고교 배정 방식도 마찬가지다. 광주시교육청은 특정학교 솔리프 현상을 막고,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살리면서 평준화의 의미를 살렸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고교 배정방식을 도입했다.

아기 양육 제대로 하려면 ‘아빠 훈련소’ 필요하다

필자 주변에 보면 여전히 남자들의 권위주의가 남아 있고, 직장 다니다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아내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부족하고, 심지어 나 몰라라 하는 남편들도 적잖다.

정말이지, 이런 남자들에게 대해서는 최근에 외신에서 들은 대로 ‘한국식 아빠 훈련소’가 필요하다는걸 깨닫는다. 아기의 기

저귀 갈아준다거나 우유 먹이는 일도 중요할 뿐더러 아기와 놀아주는 부분에서는 정말 못한다. 기뻐해야 아이를 안고 ‘까꿍까꿍’ 한다든가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깽깽”하는 정도라고 한다. 그러니 아빠 품에 안긴 아기가 자꾸 울며 보채는 것이다. 제 녀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빠가 몰라주니까.

게다가 그동안 몰랐던 상대방의 집안 문제, 혼수 갈등 같은 게 뒤늦게 지퍼처럼 커지고 터져버리면 상황이 겹치면서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 고민스러워진다.

TV드라마에선 임신만 했다 하면 다들 기뻐 난리지만 현실에선 꼭 그렇지 만도 않다.는 게 여성들의 고민거리다. 만약이 되면 회사는 어떻게 하나, 아이는 누가 돌보나 등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양육의 일은 더 커진다.

사정이 이런 데 육아를 돕기는커녕 자신

에게 신경을 덜 써준다고 투정하는 남편도 있으니 여자는 지치고 피곤해질 것이다. 산후 우울증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닌 셈이다. “맛있는 환영하지만 가사와 육아는 여자 몫”이라는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빠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줄 아빠 훈련소! 우리 지역에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시민사회 프로그램으로 로라도...

▲김심희·광주시 남구 도금동

無 等 鼓

1998년 조무제 부산지법법원이 대법원에 올랐을 때 법조계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30여년간 영남에서만 근무한 전형적인 향관(鄕判·지역법관)인 그가 쟁쟁한 경관(京判) 선배들을 제치고 대법관에 올랐기 때문이다.

‘침범거사’로 불릴 만큼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이 과격적인 발탁의 배경이 됐다. 당시 그의 재산은 7000만 원으로 103명의 고위 법관 가운데 꼴찌였다. 법원장실에 당연히 두던 비서관도 세금을 아낀다며 사양했고, 받지 못한 받은 전별금도 도서구입비로 모두 쾌척할 정도였다.

창원지법법원장 시절 관용차 사건은 지금도 후배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 부산이 피산던 그는 지법원장 발령과 함께 관용차를 받았지만 “관용차는 창원에서만 타고 다니는 것”이라며 버스로 창원까지 온 뒤 터미널에서 법원까지만 관용차를 이용했다.

또한 그는 지법원장 파선부 수석부 관장사법관법정관리기업 관리인에 친형과 동창을 선임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일부 호남 향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지역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조무제 전 대법관처럼 존경받고 향관으로 분류한다. 서울에 근무하는 경관 중에서도 흑관과 백관으로

만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이 생겨나 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홍하에 대한 보석 허가는 이러한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씨는 1000억 원대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6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지역정서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시민단체 반발과 함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담당 재판부가 이 씨의 큰 사위와 사법연수원 동기생인메타 변호사도 큰 사위의 선배이자 순천지원 향관(鄕判) 출신이라 더욱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이 13일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 취소를 청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유가 되면 허가해주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허가를 할 경우 재량권 남용이자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법당국이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나뉘 순회근무 때 지방으로 내려가면 흑관이고, 지방순회조차없이 서울에서만 뿔뿔만 백관이라고 한다. 백관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법관까지 바라한다고 할 정도니 향관이 대법관에 오른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골품제보다 더 하다”는 향관과 경관에 대한 차별의식에 좌절해 향관 가운데 일부는 토호세력과 유착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요즘 호남 향관이 언론에서 연일 질타를 받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관사가 1000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사학재단 설립자를 보석으로 석방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순천지원의 보석 허가율은 70%에 가까울 정도라고 한다.

일부 호남 향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지역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조무제 전 대법관처럼 존경받고 향관으로 분류한다. 서울에 근무하는 경관 중에서도 흑관과 백관으로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광문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 취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